

내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 역대 최대

전북도, 6개 분야 78개지구 사업비 1520억원 확보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낙후된 농촌 생활여건 개선 청년, 귀농·귀촌인들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

전북도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개발분야 신규지구 공모에 역대 최대 규모인 78개지구가 선정되어 1,520억원(국비 1,064, 지방비 456)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공간의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 지역 어디서든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촌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목표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입하여 추진한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6개 분야 78개 지구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1개소 240억원 △기초생활거점 23개소 924억원 △마을만들기사업 39개소 220억원 △시군역량강화 10개소 33억 △농촌다움 복원 4개소 80억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1개소 23억원이다.

기초생활거점, 농촌다움 복원, 공공임대주택 등 3개 분야는 2019년 처음 도입된 신규 공모사업이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읍소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무주읍이 선정되어, 주민 자치활동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방곡곡 반디센터,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지원을 위한 반디 열린공부방,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2019년부터 5년간 240억원(국비 168, 지방비 72)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 있도록 만드는 사업으로 23개소에 924억원(국비 647 지방비 277)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 역량이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9개 마을에 220억원을 투자한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창의적 사업으로 4개마을이 선정되어 8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고령화·공동화·귀농귀촌 증가 등에 대응 주거약자계층에 주거공간 및 의료·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장수군이 선정되어 장수읍 두산리에 23억원을 투입 임대주택 2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지구의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에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탄소성화봉 세계최초 제작

국내유일 탄소전문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화봉 핸들부분 50% 감량, 성화 봉송시 '장애인 배려' 의미 부여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개최지인 전북도지사 송하진(진)가 세계 최초로 탄소융합 소재로 제작한 성화봉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안에 체전 성화는 동시 봉송(99개구간 990km)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 대국민 화합의 장으로 연출감을 정한 가운데 '장애인 배려'를 위한 경량 성화봉을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국내 성화봉 제작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제작업체 이오스디자인이 손잡고 개발했다.

탄소융합 성화봉은 무게가 절반인 익산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시화인 국화, 익산 마루시지 석탑의 패턴과 형태를

표현했으며, 주재료는 알루미늄 합금이며, 특히 핸들부분은 탄소섬유 프리프레그를 사용해 탄소섬유의 경량, 고강도, 고내열, 고전도성 특성을 활용해 제작했다.

그동안 탄소 융합 성화봉 제작에 있어 지적되고 있는 가연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성화봉을 만들게 되었는데, 손잡이 부분에 적용, 당초 핸들 무게를 50% 감량하는데 성공했다.

김영로 전국체전준비단장은 "탄소융합 성화봉은 전라북도의 핵심 산업인 탄소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탄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한국지역도서전 둘러보는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 일대에서 열린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을 방문해 지역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도·시·군·경제기관, 좋은일자리 만들기 머리를 맞대 | 전북 경제 활성화 제고 노력

전북도는 당면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과 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산업관련 담당부서장 간담회를 지난 8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북의 경제성장률이 낮고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경제여건과 현대 중 조산소, GM 등 최대 제조업체 조업 중단 및 취업지수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어, 도차원의 지원시책과 정부정책 방향을 공유, 시군

유관기관과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다.

회의는 주요시책별 설명과, 협조당부, 질의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정부의 청년 신중년 적합일자리 지속확대 및 공공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분 일자리확대에 따른 일자리 사업 발굴과 소상공인 지역일자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

축 등에 따른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소상공인 지역일자 경영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온누리상품권 이용 홍보,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추석명절 물가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물가안정대책 건전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지역별 경제지표 등 분석·대응으로 지역여건

에 맞는 일자리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타 시도 우수 사례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군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헌재 소장 비난' 언론 기사 양승태 행정처가 기획·대필했다

2016년 3월 박한철 前소장 토론회 발언 트집 '고영한 지시'로 행정처가 대필→언론사 제공
검찰, 관련자 시인 진술 확보... 대가성도 수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획 기사를 작성해 한 언론사에 제공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언론사는 법원행정처가 써준 대필 기사를 별다른 수정 없이 원문대로 보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언론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대필 기사까지 작성해 '여론 농단'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원하는 기사를 써준 대가로 이 언론사와 법원행정처 간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지난 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3월 22일 작성한 '00신문 기사 초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 문건엔 박 전 소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법조인들 반응을 기사체 형식으로 작성한 글이 담겨 있다. 박 전 소장이 이 문건 작성 나흘 전 열린 한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의 헌재재판관 지명 제도를 지적하자 이를 반박하는 형식의 글을 기사체로 만든 것이었다. 당시 박 전 소장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발언을 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제도로 헌재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문건은 박 전 소장의 당시 발언을 두고 마치 법조계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처럼 묘사했다. 특히 문건엔 한 익명의 취재원이 박 전 소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기술했지만 실은 모두 법원행정처가 꾸며낸 가공 인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필 기사는 이후 해당 언론사에게 건네졌고 며칠 뒤 별다른 수정 없이 기사로 보도됐다. 기사는 이 언론사 소속 기자 이름으로 기사가 나갔지만, 당사자는 그런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고영한 대법관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시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재와의 갈등 양상에서 여론을 사실상 조작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건을 작성한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고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기사 보도의 대가로 해당 언론사에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태풍 솔릭·호우 피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9억 지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제19호 태풍 솔릭(SOLIK·전설속의 폭풍)과 호우 피해(8월 28일 ~ 9월 4일)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시설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 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행안부는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원을 지원하는 등 13개 시·도에 총 39억원을 지원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